

전북도 미생물산업 중심지 우뚝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견인

신규사업 발굴·집중 육성 가속페달

전북도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기본인 미생물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 조성을 견인하기 위해 미생물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미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에 준공된 정읍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전국적으로 산재된 미생물자원과 전통 미생물 자원을 기능적으로 재분류, 산업적 활용과 국가적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2011년에 설립 운영된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전통 미생물 균주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이미 식품용 미생물의 본가가 되었으며 농축산용 미생물은 2017년에 개소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전담 육성하고 있다.

그동안 미생물산업 육성관련 주요 핵심 인프라 구축현황을 보면 국내 미생물 핵심연구 및 산업화 거점으로 조성했다.

정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전국적으로 산재된 미생물자원과 전통 미생물 자원을 기능적으로 재분류, 산업적 활용과 국가적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대와 항생제 사료 첨가금지 등으로 미생물산업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화 기반이 열악함에 따라 유망한 농축산용 미생물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축했다.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은 수천년 자원화된 우리 토종 미생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균주 기준을 확보, 국내관련 산업화에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장건강 프로젝트는 2016년 6월 미래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억원 규모로 정제 되어 있는 전통 청국장 시장을 바이오 기술을 적용하여 건강식품 진출을 유도함으로써 1,000억원 시장으로 확대하고 전통 청국장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 등재를 통한 글로벌

별 식문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구축된 미생물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미생물분야로 3,500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을 발굴, 순창과 정읍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전문용역을 통해 세부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에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정읍의 생명공학연구원,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미생물산업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시아 농생명 허브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인재양성 요람' 신규 입사생 선발

전북도 서울·전주 장학숙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전라북도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가 2018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입사생 모집인원은 총 242명(서울장학숙 122명, 전주장학숙 120명)으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 2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입사생 선발은 시군별로 구분 선발하며, 성적 50%, 가정형편 5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전라북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

이면서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서울장학숙은 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전주장학숙은 전라북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성적 기준은 신입생은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성적의 백분위 평균이 서울장학숙은 80점 이상, 전주장학숙은 60점 이상, 예체능 계열은 50점 이상, 재학생은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이 B학점(전주장학숙은 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방법은 전라북도 서울·전주 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와 각 시·군청 관련부서, 서울·전주 장학숙, 도청(인재육성재단)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1조3133억 투입

행정안전부가 올 한해 1조3133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0억원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도심지 침수지역 등 펌프장 설치, 도심지 침수지역 저류지 설치, 홍수범람 위험 구간 등 소하천 정비 붕괴위험 노수저수지 보수·보강,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 지역 934곳에 1조3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 침수 피해지역에는 배수펌프장·저류지가 설치되고 사면과 저수지 붕괴위험 지역은 시설물을 보수·보강된다.

행안부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말 조기발주(90%),

유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60%) 등을 목표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8% 이상(국비 3811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급경사지 사면,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35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호국영령들의 송고한 넋 기리며

3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양부지사, 실국원장 및 간부들이 전주 완산구 교동 군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송고한 넋을 기리며 신년 군경묘지 참배를 하고 있다.

'청년정책' 청년이 만든다

도, 28일까지 제3기 포럼단 60여명 공개모집

전북도는 청년 정책의 제안 및 의견수렴과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라북도 제3기 청년정책 포럼단'을 2018년 1월 28일 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제3기 청년정책 포럼단은 6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도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으로

대학 재학생, 직장에서 근무중인 청년 등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북도는 14개 시군 청년들의 세부 관심사별로 모집분야를 신청받고, 필요시 대면 네트워킹을 통해 주제별 관심사항과 포럼활동 참여 의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포럼 지원신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의 공고 고시에서 확인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정책포럼은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 청년과의 소통으로 공감하고 청년의 주요관심사와 키워드를 공론화 하는 등 청년 협의체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

제3기 청년정책 포럼은 다양한 지역 청년문제를 발굴·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청년문제

해결사로 활동하고, 청년정책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면서 전라북도 청년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3기 청년정책 포럼에 선발된 청년은 오리엔테이션(워크숍)을 통해 포럼의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분과를 구성, 청년주도의 본격적인 청년정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과 함께 소통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제안에서 실현까지 단계별 청년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최저임금 인상 사장들은 나몰라라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자 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주시 한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나모씨는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장사가 잘 되면 올려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뀐 만큼 최저임금만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말하지 못했다"며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비슷한 사정이다"고 하소연했다.

또 "시급을 6500원으로 계산해 받기로 했다. 월급이 오르면 부모님 패당을 사드리려 했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법을 위반하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나씨 외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탁 알바노조 전북지부장은 "아직 이달 월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단정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항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역대 최대 인상율(16.4%)을 기록한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도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35)씨는 "우리 가게는 항상 최저임금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해 왔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알바생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